

DDA협상과 한국경제의 대응

2002. 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낙균 무역투자정책실장

< 차 례 >

1. DDA 논의동향과 전망	1
1. 도하개발아젠다의 출범	1
2. 협상 체제 및 일정 수립	2
3. 분야별 논의 동향	3
4. 개발 문제 논의 동향	8
5. 평가 및 전망	10
II. DDA의 경제적 효과	12
1. DDA와 세계경제질서	12
2. DDA의 경제적 효과	14
III. DDA와 한국경제의 대응	17
1. 협상전략	17
2. 농업대책	18
3. 제조업 대책	20
4. 서비스 부문의 대응	22
5. 기업경영	24

1. DDA 논의동향과 전망

1. 도하개발아젠다의 출범

- 세계경제는 2005년 1월 1일까지 3년의 기간동안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최종협상안을 타결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국면에 돌입

- 2001년 11월에 채택된 도하각료선언문은 DDA가 폭넓고 균형적인(broad and balanced) 작업계획을 포괄하도록 규정

- 서비스, 농업 등 기설정외제는 현재 WTO에서 각국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구체적 협상방식에 대한 논의를 이미 벌여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협상의 원칙과 양허안 제출시한을 명시함. 비농산물(공산품) 시장접근에 있어서는 협상의 목표와 방향 제시

- WTO규범의 개정과 관련하여 반덤핑, 보조금, 지역무역협정의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는 협상을 벌이도록 예정
 - 싱가포르 이슈(투자, 경쟁, 정부조달투명성, 무역원활화)는 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방식에 따라 5차 각료회의(2003년 10월 이후 멕시코 개최 예정) 이후 협상을 개시

 - 지적재산권(TRIPS)과 관련하여 지리적 표시에 대한 통보 및 등록과 관련한 다자체제 설립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

 - 환경과 관련하여, 각료선언문은 WTO기존규범과 MEA 무역관련 의무와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

- UR협상 이후 초래된 개도국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이전, 기술협력 및 능력배양 등 추가적인 지원조치 논의

<표 1> DDA의 협상의제

의 제	양허안 제출 및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서비스 · 분쟁해결양해 · 비농산물 시장접근 · TRIPS · WTO규범 (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 환경(무역장벽감축, MEA·WTO 정보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차각료회의(농업), 2003년 3월(서비스) · 2003년 5월(개선 및 명료화) ·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이익 고려 · TRIPS와 공중보건은 특별선언문 채택 · 규정의 명료화 및 개선 · 무역과 환경의 상호보완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 투자, 경쟁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 CTE의제, 무역·부채·금융 · 소규모경제 등 개도국 관련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차 각료회의 보고사항 · 검토 작업대상

2. 협상 체제 및 일정 수립

□ 2002년 2월 1일 협상의 총괄감독기구인 무역협상위원회(TNC: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1차 회의를 개최, 협상 체제 수립

○ 7개 분야에 대해 협상 그룹 설치

-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시장접근, 규범, 환경,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양해
- 개발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 포럼도 지정
- 2003년 제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개시하게 되어 있는 싱가포르 이슈¹⁾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상그룹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작업반을 활용

○ 협상 진행방식에 대한 지침 채택

- 협상 과정의 투명성 및 모든 회원국의 참여 보장

1)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 2002년 2월 15일 협상그룹별 의장 선임

※ 정의용 주제네바대사가 지재권 분야 협상그룹 의장직을 수임

□ 3~4월중 각 협상 그룹별로 1차 협상회의를 개최하여 금년중 작업 계획을 확정하고 논의를 개시

○ 협상 그룹별로 금년 중 3~4회의 공식회의 및 비공식 회의 개최

○ 단, 비농산물 시장접근은 회원국간 이견으로 7월에 작업계획 확정

※ 4월 21일 제2차 TNC 회의 개최

□ 5월 14일 협상의 중간 점검을 위한 제5차각료회의(멕시코)를 2003.9.10~14 칸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 2003년 상반기중 개최를 희망한 미국, EU와 10월 이후 개최를 희망한 개도국간의 타협

- 5. 16: 주요국 비공식각료회의(OECD 각료이사회 계기)

- 7. 17: 24개 주요국 본부고위급 비공식회의(제네바)

- 7.18~19: 제3차 TNC 회의

3. 분야별 논의 동향

□ 농업

○ 도하 각료선언문은 2002.3.31까지 수출보조, 시장접근, 국내보조에 대한 협상 modalities를 수립하고, 각국이 제5차 각료회의까지 양허안 초안을 제출토록 규정

- 농업협상 회의에서 2003.3월말까지의 modalities 협상 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논의를 진행 중
 - 금년 말까지 논의 후 2003.2월 의장이 modalities 초안을 제시, 3월말까지 협상 예정

- 6월 협상회의에서 수출보조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9월 회의(2회)에서 시장접근 및 보조금 논의 예정
 - 수출보조 관련 농산물 수출국그룹(케언즈그룹)은 3년간, 미국은 5년간 수출보조 철폐를 주장하는 반면, EU는 단계적 감축을 주장
 - 시장접근에 대해서는 미국이 모든 품목 관세율을 25%이하로 인하(스위스 formula)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케언즈그룹은 고율관세는 스위스 formula, 저율관세는 일괄선형 감축방식을 추진하는 반면, EU, 일본, 한국 등 비교역적 관심사항그룹(NTC 그룹)은 UR 공식(평균 33% 감축)을 적용할 것을 주장
 - 국내보조에 대해서는 미국이 5년간 총생산액의 5%이하로 감축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케언즈그룹도 궁극적으로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NTC그룹은 반대

□ 서비스

- request에 기초한 양자협상과 함께 서비스 협상회의에서의 수평적 이슈(세이프가드 등 관련 규범 제정, 자발적 자유화에 대한 크레딧 인정, MFN 면제 등) 논의를 병행

- 양허협상과 관련 도하각료선언문은 각국이 2002.6월말까지 1차 양허요청안(initial request)을 제출하고, 2003.3월말까지 1차 양허안(initial offer)을 제출토록 규정

- 우리는 6.28 36개국에 대해 request를 제출하였으며, 8.31 현재 20개국으로부터 request를 접수
 - 선진국은 금융, 통신, 유통, 건설, 전문직 서비스 등 폭넓은 분야에서 과감한 개방을 추진하는 반면, 개도국은 시장개방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면서 기술인력의 선진국 시장 진출을 추진
 - 우리는 금융, 통신, 해운, 건설, 유통 등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과 동남아 시장 진출을 추진
- 규범 분야는 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상품과 유사한 규범 수립이 용이하지 않아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

□ 비농산물 시장접근

- 7.19 협상 modalities(관세, 비관세 감축을 위한 세부 원칙) 수립 시한 등 협상 일정에 합의
 - 2003년 3월말 modalities outline 설정 후 2003년 5월말 확정
 - ※ 선진국들은 modalities 수립시한으로 농업협상과 동일한 2003.3월말을 희망하였으나, 인도, 중국, 파키스탄 등 개도국들은 협상 준비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3.7월말을 희망, 중간선에서 타협
- Modalities로 EU, 일본, 한국 등 다수국은 formula 방식을 희망하나, 미국은 양자협상 방식을 선호
-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인 개도국의 관세인하 정도, 섬유, 신발 등 개도국 수출품목에 대한 선진국의 고관세 인하 여부가 쟁점

라. 규범

- 반덤핑, 보조금, 수산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 등 분야별로 회원국들의 제안서에 기초하여 논의를 진행 중
 - 분야별 유사입장국들(Friends)이 공동제안서를 제출하여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노력

- 당분간 기존 협정의 개정 방향 및 개정 대상 조항의 발굴에 주력 예상
 - 한국, 일본 등 반덤핑 Friends는 반덤핑 발동 및 연장, 반덤핑마진 산정 관련 규정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동제안서를 제출, 미국은 이에 반대하면서 개도국의 반덤핑 절차 개선을 추진
 - 수산보조금에 대해 소위 미국, 뉴질랜드, 아이슬랜드 등 Fish Friends는 수산보조금이 어족자원 고갈을 초래한다고 하면서 수산보조금에 대한 별도 규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 일본은 이를 반박
 - 지역협정 관련, 호주, 홍콩, 인도 등은 FTA 등 지역협정의 체결요건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도 부분적으로 동조하고 있으나, 지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다수국은 소극적 입장

□ 환경

- 회원국 제안서를 기초로 WTO와 다자간 환경협약(MEA)간의 관계 및 환경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문제를 논의 중
 - WTO와 MEA간의 관계에 대해 EU를 비롯한 유럽국가들은 환경보호를 위한 MEA상 무역규제조치를 폭넓게 인정할 것을 희망하나, 미국, 호주, 개도국 등 다수국은 반대
 - 우리나라도 EU의 접근방식에 대해 유보적 입장 표명

- 환경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문제는 각각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과 서비스 협상에서 다루되, 환경협상에서는 환경상품의 정의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

□ 지적재산권

- 포도주 및 증류주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한 다자등록체제 수립 문제를 논의
- 유럽국가들은 구속적 성격의 등록체제 수립을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 호주, 중남미국가 등 이민 국가들과 한국, 일본은 데이터베이스 수준의 자발적 체제를 주장
- 양 진영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다자등록체제의 예상비용 등 세부 요소별로 이견을 좁히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

□ 싱가포르이슈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 제5차 각료회의 이후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서 회원국 제안서를 기초로 다자협정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
- 다자협정 채택을 희망하는 EU, 일본, 한국 등은 요소별로 제안서를 제출, 심도있는 검토를 추진
 - 개도국들은 다자규범 수립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투자의 경우 일부 동남아, 중남미 개도국이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

4. 개발 문제 논의 동향

(1) 개 관

- 도하개발아젠다라는 명칭이 보여 주듯이 개도국의 개발 문제는 금번 협상의 핵심 사안중의 하나로서, 협상의 성공적 종결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다양한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래 문제가 핵심
 - 각 협상 분야에서 개도국의 필요와 이익을 반영
 - UR 협상결과에 불균형 시정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문제 해결
 - WTO협정상 개도국우대조항(S&D: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의 효력 강화
 - 최빈개도국 산품에 대한 시장접근 대폭 확대
 - 대개도국 기술지원 확대

(2) 논의동향

- 이행문제
 - 도하각료회의에서 해결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약 50개 문제에 대해 현재 각 협상그룹 및 WTO 산하기구에서 논의를 진행 중
 - 결과를 금년 말까지 TNC에 보고 필요

- 전반적으로 개도국들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

□ 개도국 우대조항 효력 강화

- 무역개발위원회에서 WTO 협정상 155개 S&D 조항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
 - 개도국은 S&D 조항을 일률적으로 의무조항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선진국은 개별 조항별로 검토할 것을 주장하는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만 진행
 - 금년 7월 말까지 검토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금년 말까지 보고시한을 연장

□ 최빈개도국 시장접근 확대

- 최빈개도국과 EU는 최빈개도국 산품에 대한 관세 및 쿼타 철폐를 주장
- 여타국들은 기본 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이를 강제화하는 대신 각국이 동 목표 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할 것을 희망

□ 대개도국 기술지원 사업 확대

- 2002.12 개도국의 효과적인 협상 참여를 위한 기술지원 목적으로 DDA 신탁기금을 설치
 - 2002.3.11 기여금 서약회의에서 총 29개국이 금년중 3천만 스위스 프랑 공여를 약속
 - 우리나라는 25만불(42만 스위스프랑) 공여

- 현재 약 200개 기술지원사업이 진행중이며, 회원국들은 기술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수행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

5. 평가 및 전망

(1) 평 가

- 협상의 출발은 순조로웠던 것으로 평가
 - 신속한 협상 체제 수립
 - 충분한 개도국 기술지원 기금 확보
 - 멕시코 각료회의 개최시기에 대한 원만한 합의 도달
- 다수국은 그러나 3년 협상 시한에 비추어 협상 진전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
 - 농업, 서비스 외의 일부 협상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진전이 미미
 - 이행문제, S&D 등 개도국 관심분야에서의 진전 부진에 따라 개도국이 sequencing을 강조하면서 slowest common denominator 현상 발생
 - 환경, 지적재산권, 싱가포르 이슈 등은 회원국들의 제안서를 기초로 협상의 방향 및 주요 협상 요소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 작업을 진행
 -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의 협상 일정에 대한 합의 지연
- 반면 일부에서는 금번 협상이 UR협상에 비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

- 협상 출범 6개월 내에 실질 논의를 진행
- 농업 및 서비스의 경우 지난 2년간 협상 결과 축적

(2) 단기 전망

- 금년도 하계휴가 후에는 좀 더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 농업분야 modalities 논의와 서비스 분야에서의 request 협의본격화
 - 여타 분야에서도 다수 회원국의 분야별 협상 입장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이 신속협상권(Trade Promotion Authority)를 확보, 적극적으로 협상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 금년 말부터 내년 3월말까지가 협상의 1차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
 - 대부분의 협상 분야에서 10~11월까지 주요 쟁점에 대한 1차 논의를 완료 예정
 - 금년 말까지 이행문제 검토결과를 TNC에 보고하고, 내년 3월말까지 농업협상 modalities 수립 및 서비스협상 1차 양허안 제출 필요
- 멕시코는 제5차 각료회의 개최전 쟁점 조정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내년 상반기중 2~3회의 소규모 비공식각료회의 개최 추진
 - 금년 11.14~15간 호주(시드니)에서 약 20개 주요국 참석 비공식 각료회의 개최 예정

II. DDA의 경제적 효과

1. DDA와 세계경제질서

- DDA 협상은 21세기 세계 경제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로 작용
 - DDA에서는 농업, 공산품, 서비스시장개방 뿐만 아니라 규범개정 등 광범위한 의제(broad and balanced Work Programme)를 다루기로 합의함으로써 세계 경제 전반에 걸친 파급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특히, 전면적인 무역규범의 제정 및 개정작업이 이루어진 UR협상과 다르게 DDA협상에서는 무역규범의 개정보다는 시장개방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예상
- 세계은행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DDA협상에서 각분야의 무역보호수준을 40% 삭감할 경우 4,931억 달러의 후생증대 예상
 - Brown에 따르면, DDA에 따라 무역장벽이 33% 인하되면 세계후생은 6,130억 달러 증대 예상
- 또한, UR협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DDA의 출범자체가 세계무역환경을 개선시키는 효과 예상
 - UR협상시 합의된 사항을 아직 이행하지 못한 나라는 DDA에서 협상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DDA의 협상기간중 UR합의사항을 이행하려는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 또한, DDA가 타결되어 받게될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WTO 회원국들은 보호주의조치를 가급적 억제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DDA협상은 세계경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에 따라 각국경제에 도전으로 작용
- DDA협상은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세계무역질서를 지향할 것이기 때문에 세계적 차원의 시장개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WTO출범 이후 노동, 환경 등의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세계적 빈부격차의 확대에 인하여 반세계화의 거센 도전 대두
-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산업에 있어 세계적 차원의 시설과잉(overcapacity) 문제가 심화되면서 통상분쟁 빈발
- DDA가 타결되면 각국 산업의 우열이 뚜렷하게 드러남에 따라 경쟁우위를 확보한 기업성장세가 가속화되는 반면, 취약부문의 어려움은 가중되는 이중 구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해외시장에서의 시장확보를 위한 기업경쟁이 치열해 지고, 주요 기업들은 전략적 제휴와 해외투자를 통한 합종연횡을 활발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
- 또한, 환경, 반덤핑, 보조금, 지역무역협정, TRIPS 등 무역규범이 개정되면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
- 특히, 환경이슈와 관련하여 도하각료선언문은 WTO의 기존규범과 다자환경협약의 무역관련의무와의 관계 등 3개의 사항에 대한 협상

을 개시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향후 다자환경규범의 제정 여부가 세계무역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2. DDA의 경제적 효과

□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인에 따라 좌우될 예상

- 첫째, 국내무역장벽의 수준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 둘째, 향후 어떠한 협상방식이 채택될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이 어느 정도의 폭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 셋째, 국내산업의 대응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 DDA의 윤곽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DDA협상이 타결되는 경우 나타나게 될 경제적 효과를 포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CGE (일반균형연산모형)를 이용하여 시나리오별 정책실험을 수행하였음.

- 첫째, 국내무역장벽을 계측하기 위해 서비스교역장벽에 대한 두가지 추정치(Hoekman vs. 중력모형 추정치)를 고려
- 둘째, 협상방식으로서 (1) 모든 품목에 대해 무역장벽이 34% 일괄적으로 완화되는 일괄선형인하방식, (2) 선진국과 개도국의 시장개방폭에 차등을 두는 관세조화방식을 고려
- 셋째, 우리나라 산업의 대응력을 포착하기 위해 국내시장이 (1) 완전 경쟁적인 경우와 (2) 독점적 경쟁인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

- 분석결과에 따르면 완전경쟁의 가정하에서는 대체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1.08~1.97%의 실질GDP 증가효과가 나타나며, 독점적 경쟁을 가정하는 경우에 2.55~4.21%의 실질 GDP 증가효과를 예상
-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완전경쟁의 가정하에서 각각 0.27~0.43%, 0.35~0.65%의 GDP증가가 예상되며, 독점적 경쟁의 가정하에서는 각각 0.11~0.30%, 0.41~0.96%의 GDP 증가 예상
- 여타 주요국중에서는 중국과 아세안이 완전경쟁의 가정하에서 각각 1.06~1.88%, 0.94~3.29%의 GDP 증가가 예상되며, 독점적 경쟁의 가정하에서는 각각 2.35~4.43%, 4.06~13.03%의 GDP 증가 예상

<표 2> 실질GDP에 미치는 영향(%)

	정태적/완전경쟁		동태적/독점적 경쟁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1	시나리오2
한국	1.08	1.97	2.55	4.21
미국	0.27	0.43	0.11	0.30
일본	0.35	0.65	0.41	0.96
EU	0.55	1.54	0.83	2.71
캐나다	0.37	0.91	0.47	1.57
중국	1.06	1.88	2.35	4.43
아세안	0.94	3.29	4.06	13.03
기타	1.10	1.62	2.41	2.64

주: 시나리오1: 일괄인하를 가정하고 교역장벽을 중력모형으로 추정

시나리오2: 관세조화방식을 가정하고 교역장벽을 Hoekman방식으로 추정

- 독점적 경쟁을 가정하는 동태적 모형에서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한국의 수출은 6.70~6.75%의 수출증가와 7.73~7.85%의 수입 증가가 예상되며, 교역조건은 0.83~0.91% 개선될 것으로 예상

<표 3>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수출		수입		교역조건	
	시나리오1	시나리오3	시나리오1	시나리오3	시나리오1	시나리오3
한국	6.70	6.75	7.73	7.85	0.91	0.83
미국	4.71	4.64	3.66	3.58	0.07	0.08
일본	5.73	7.09	6.55	8.21	0.82	1.20
EU	2.60	2.33	2.59	2.31	0.25	0.05
캐나다	1.75	2.19	1.75	2.25	0.15	0.10
중국	11.62	13.59	13.62	16.64	-0.62	-2.22
아세안	7.15	11.84	7.62	12.98	-0.32	-1.42
기타	7.94	3.89	7.79	3.59	-0.74	0.01

주: 동태적/독점적 경쟁의 가정하의 분석결과임.

시나리오 3: 관세조화방식을 가정하고 교역장벽을 중력모형으로 추정

- DDA에 따라 우리 경제가 2.55~4.21%의 실질 GDP 증가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바, 이러한 결과는 DDA가 우리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점을 시사함.
- 하지만, 경제적 효과의 크기는 협상방식 등 향후의 협상 결과와 우리 경제의 대응여하에 달려있음.
- DDA협상은 가격 하락을 통해 수출입, 국내생산, 수요부문 등에 파급영향을 미치게 됨.
- 각국 경제에 나타나게 될 효과는 협상타결후 대략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나타날 것으로 예상
- 또한, DDA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기술혁신 및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동태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별로 크기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참여국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

Ⅲ. DDA와 한국경제의 대응

1. 협상전략

- 지난번 UR협상을 돌이켜 보면, 우리 경제는 쌀시장개방에 따른 단기적인 충격과 경제사회적 비용에 관심이 높았지만, 장기적인 효과의 극대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협상의 막바지에 가서야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및 협상전략을 마련했기 때문에 중장기적 비전의 제시가 미흡했던 아쉬움도 있음.
-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내산업은 DDA가 타결되면 무역장벽 완화에 따른 계량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반덤핑협정의 개정 등을 통해 대외 무역환경이 개선되면 비계량적인 혜택도 클 것으로 예상
- 특히 한·칠레 FTA협상 등이 일부 부문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로서는 DDA가 성공적으로 조기에 타결되는 것이 긴요
- 또한, 공산품 및 서비스분야의 분야별·품목별 request/offer협상을 국내산업의 해외진출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협상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 아울러, 그동안 미국 등 주요국 수입규제의 타겟이 되어 온 국내산업으로서 반덤핑 및 보조금협정의 명료화를 위한 개정작업에서 국내기업의 이익이 반영되도록 friends group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함.

2. 농업대책

- 한국농업은 2001년도 기준 전체 GDP의 3.7%, 인구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수출의 0.8%, 총수입의 3.8%를 차지하고 있음.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동안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의 생산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음.
- 99년 현재 60세 이상 농촌인구는 33%(전체 인구 중 60세 이상 인구구성비 14.8%)이며 후계농이 없는 농가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노령화, 부녀화 등의 농촌인구 구조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음.
-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도 유통마진이 공산품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99년 기준 평균 38.7%), 도매시장 운영의 비효율 및 다원화된 유통경로의 부족, 규격포장화 미비, 물류시스템의 낙후에 따른 물류효율의 저하, 조직적인 생산·출하시스템 구축미비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음.
- 농업정책에 있어서는 효율성의 개념보다는 형평성 등의 이념적 요소가 정책결정과정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투융자사업에 보조적인 성격이 높아 경제성을 무시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농업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분야로서, 동 분야에서의 문제로 인하여 한국의 대외정책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음.
 - 물론, 식량안보, 지역사회 보전, 환경보호 등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도 있으나,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 소비자 후생의 손실 문제는 오히려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현재 농업의 문제점은 농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사업선정 및 자원배분이 일어나지 못하고 정부에 의한 의사결정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며, 이에 따라 사업실패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고 있음.
- 현재, 농업분야는 서비스분야와 함께 WTO의 기설정정의제의 하나로써 이미 2000년도부터 차기협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타 협상의제에 비해 협상의 진행속도가 빠른 편임.
 - 다만, 시장접근(관세, TRQ, 국영무역 등), 보조금(감축대상보조, 허용보조 등), 수출보조, 수출신용 등에 관한 지금까지의 협상은 회원국간 현저한 입장차이로 인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 DDA 농업협상은 쌀의 관세화 유예연장 여부,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 등 한국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어려운 협상이 될 것임.
-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한국농업의 구조조정은 시급히 요청되는 과제이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 농업분야 구조조정전략의 구체화를 통한 장기비전의 제시
 - 경쟁력이 없고 식량안보상 중요하지 않은 품목의 시장개방의 확대 (최소한의 식량자급율은 유지)
 - 쌀의 관세화도 고려(관세수입을 허용보조금으로 활용)
 - 직불제의 확대(환경보전 직불제 등)
 - 농업투융자사업의 개혁(사업자 선정시 효율성 우선 고려)
 - 농협유통사업의 개혁 등

3. 제조업 대책

- 최근 세계경제는 정보통신 등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 세계화와 경쟁의 심화, 수요의 고급화·다양화 등 새로운 상황이 전개
- 선진 경제의 경우, 70% 이상의 근로자들은 정보 처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공장근로자들의 대부분도 육체적 노동보다는 정신적 노동에 더 많은 비중을 둬.
 - 인터넷과 같은 전 세계적 네트워크의 발달은 바야흐로 '지구촌시대'를 구현
- 18세기 산업혁명 이래 세계경제는 경제자원의 희소성(scarcity)이 중요한 경제원리로 작용했으나, 앞으로의 경제는 풍부성(abundance)이 더욱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잡고, 이에 따라 산업자본시대의 수확체감의 법칙대신에 수확체증의 법칙이 지배할 것임.
 - ※ 일반적으로 경제자원은 이용되고 난 후에는 고갈되지만 정보와 지식은 타인과의 공유가 가능하며, 응용의 과정을 거치면 실제적으로 증가
- 앞으로 제조업분야는 지식과 정보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전통산업도 지식 및 정보기술과의 융합여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됨.
- 가상 시장 및 조직들은 적절한 기술과 방법을 이용한다면 시간과 공간에 큰 구애되지 않으며, 개별국가들의 법·제도·장벽을 뛰어넘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

- 우리 경제의 경우 DDA협상이 타결되면, 전기·전자 등 정보기술산업 뿐만 아니라, 섬유·의류, 석유·화학, 계 등 전통산업의 생산 및 수출이 상당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경쟁력강화와 기술개발 여하에 따라서는 틈새 시장개척 등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도 가능
- 특히, 현재 세계 5위권 이내인 자동차, 조선, 전자, 석유화학 등은 DDA협상이 타결되면 향후 주요국의 시장개방에 따라 수출확대 및 규모의 경제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환경, 항공·우주, 생물, 신소재 등 현재 발전초기단계로서 세계시장점유율이 미미한 신산업도 세계속의 위상이 크게 강화되어 세계 10위권내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 비농산품(공산품) 시장접근협상은 우리 경제가 뉴라운드에서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정부와 기업들은 국별·품목별 경쟁력을 분석하여 향후 협상에 대비해야 함.
- 우리나라는 관세인하공식에 근거한 공산품협상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하되, 미국의 주장에 따라 품목별 및 부문별협상이 추진될 가능성에도 면밀하게 대비해야 함.
- WTO회원국의 품목별 관세율 및 경쟁력 현황분석을 토대로 품목별 request/offer 협상안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부문별 협상이 추진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함.

4. 서비스 부문의 대응

- 서비스업의 개방은 상당부분이 외국업체가 국내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진기술이나 경영기법을 가진 외국업체가 진출해서 국내 서비스업의 일원이 됨으로써 그 자체로써 국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임.
- 또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서비스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제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갖게 됨.
- 서비스산업의 개방은 거시경제적 파급효과이외에도 유통서비스에서와 같이 산업구조의 개혁이나 통신서비스의 경우에서처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라는 미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므로,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게 됨.
- 법률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기업들의 국제거래 관련 법률 자문 수요를 충족시키고 그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임.
- 교육서비스의 경우 실질적으로 외국대학들이 국내에 분교를 설립하게 되면, 해외유학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기존 국내 대학을 자극하여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임.
- 시청각서비스를 포함한 문화산업의 개방은 일반국민의 의식을 개방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다른 서비스분야에서의 외국인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갖게 될 것임.
- 금융서비스가 추가 개방되면, 기업들이 자금조달과 운용을 최적으로 조합할 수 있게 되고, 금리변동이나 환율변동에서 발생하는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됨.

-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향후 DDA 서비스협상에서 주요 서비스 분야들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이 요청됨.
- 법률서비스의 경우 외국 변호사나 외국의 법률사무소가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여 자국법이나 국제거래 관련법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외국변호사가 투자형태를 통해 국내 변호사와의 동업을 하거나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함.
- 시청각서비스의 경우 영화 부문의 스크린쿼타와 방송 부문의 프로그램쿼타를 완화하고, 대신 국산영화 전용 상영관의 설립이나 보조금 등을 통해 국내 시청각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 등에 대한 외국인지분 제한(33%), 전송망사업에 대한 지분제한(49%),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전체 운용채널의 10%로 제한하는 규제 등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함.
- 교육서비스의 경우 각 시·도당 외국대학의 분교 하나씩만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과 비영리법인 요건을 완화하고, 그 외 실질적으로 외국대학이 국내에 분교를 설립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금융서비스 부문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취한 자발적 자유화 조치들을 양허표에 반영하고, 그 외 파생상품을 포함한 신금융상품에 대한 제한,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외국환거래 제한, 중소기업 대출의무, 보험중개서비스의 국경간 거래 제한 등의 완화가 필요함.

5. 기업경영

- DDA 출범은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이자 위협으로 다가올 것임. 특히 기업의 대응자세에 따라서 승자가 될 수도 있고 패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임.
- DDA 출범으로 전세계 자유무역이 가일층 증대될 것이며, 기업경쟁이 격화될 것임. 그 결과 세계경제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임. 그러나 모든 기업이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님.
-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은 비교우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임.
 - 기업경쟁의 격화에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한 기업들에게는 가혹한 구조조정이 있을 것임.
- DDA 출범은 농업, 제조업, 서비스 등 기업이 속한 업종에 따라 영향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향후 협상내용에 대비한 기업의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농업분야의 기업들의 경우 개방을 피할 수 없는 변화로 받아들이고 경쟁력이 없는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변화의 모색이 있어야 할 것임.
- 제조업종 기업의 경우 관세인하로 수출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이번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자세로 틈새시장을 공략할 경우 기대이상의 혜택도 볼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한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기술개발 강화가 필요함.

- 우리나라의 수입관세 인하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이나 기술수준차이가 큰 자본재 산업의 경우 국내 시장잠식이 예상되는바, 이러한 성격이 큰 업종의 기업들은 신속한 구조조정 및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전환이 시급함.
- 서비스 시장개방으로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을 갖춘 외국업체가 진출할 것이므로 국내 서비스 업체와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내 서비스업체들의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 추진이 필요함.
 - 특히 금융, 법률, 교육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혁신이 요구됨. 그러나 정보통신, 해운, 항공 등의 분야에서는 해외시장 진입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DDA 협상의제로 환경문제가 포함되었고, 앞으로 투자 및 경쟁정책 이슈도 논의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 새로운 통상이슈가 개별기업의 경영활동에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도 필요함.
- 환경의제와 관련해서 기업들의 친환경적인 경영활동이 보다 강조되는 것이 필요함. 친환경적인 경영활동은 단기적인 대응으로는 불가능하며, 장기간 상당한 투자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지금부터 관심을 두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투자와 경쟁정책 이슈는 특히 해외투자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바, 해외사업활동과정에서 직면하는 많은 애로사항들을 정부협상단에 제공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